



인천공항공사가 이달말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정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뺏기 아냐”

## 청와대, 공정성 논란 해명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해명에 나섰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데 따른 행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촉발한 공정성 논란으로 거센 비판까지 받은 만큼 청와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정원경찰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청년층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데 대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에 분노하는)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 논란 근본 원인은 ‘청년 취업난’ 정부서 책임감 갖고 해결해야

## 노동시장 공정성 지향하는 과정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 합의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취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은 오해가 있었다. 다만 그 저변에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 여전히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현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해 “일단 공공기관의 운영이 비용 절감·효율성 이런 것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하청 청년 근로자들의 사망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어도 계속되는 일자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또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

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종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수석은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이미 직접고용 대상으로 노사,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그 때 약 1만 명 정도의 정규직이 보통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3000명 정도는 직접고용 하고 핵심적인 생명안전 관련 업무들, 그다음에 7000명 정도는 자회사로 전환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황 수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례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용역계약이) 다 종료된 시점에서 일괄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직접고용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고용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또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취업준비생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해 그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한다. 그 이후에 들어온 분은 전환될 일자리는 걸 알고 온 분이기 때문에 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황 수석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곧바로 그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합의에서도 그렇듯이 단계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통합당 “상임위원장 명단 안낼 것” 대야투쟁

##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국회 복귀 “3차 추경 문제 많아” 송곳심사 예고

미래통합당이 25일 대야투쟁을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선 것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요청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심의도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 입장은 통합당 없이도 마음껏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 요청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복귀로 3차 추경을 포함한 국회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통합당이 ‘단일대오’로 강도 높은 대야투쟁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바람은 무산됐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 차원에서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 “(여당이 상임위원)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요구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전 여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어서 야당 협조가 불가피했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니 그렇게 해 보라는 거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요구를 들어주고 협조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대야투쟁을 하되, 시급한 현안은 챙길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민생 현안은 외면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야당 국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뭉니 부릴 생각 없다”며 “정상적인 원 구성이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만, 그사이

에라도 우리는 상임위 배정 등을 잠정적으로 해 그룹별로라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운 3차 추경에 대해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1차 추경 집행도 아직 미진한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며 “추경 문제점을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중배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과 관련해 “추경예산은 모두 다 분석했다.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하나하나 발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경과 관련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예고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정부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도 재차 언급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지난 3년간의 ‘분식 평화’와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도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 내수활력 제고... 농축산·식품업계, 동행세일 동참

## 농식품부, 오늘부터 할인판매 외식·관광 활성화 홍보 병행

오픈마켓과 홈쇼핑,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우리 농축산·식품 할인 판매전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침체된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에 농축산·식품 업계도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축산·식품 업계 동행세일에서는 우리 농축산물과 식품, 생필품 중심의 할인행사와 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할인 홍보 행사가 병행된다.

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변화된 비대면 방식의 소비패턴을 반영해 온라인 채널 특별판대전이 열린다. 국내 대표 오픈마켓 7개사와 1200여개 농가가 참여하는 ‘농식품 온라인 직거래기획전’이 8월까지 진행된다. 6월에는 쿠팡과 11번가, 7월에는 옥션과 G마켓, 8월에는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에서 산지 직배송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된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날인 2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TV홈쇼핑에서는 26일 마늘농가 특집 공영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홈앤쇼핑, GS홈쇼핑에서 순차적으로 9월 말까지 농산물 판매프로그램이 총 65회 방송된다.

한돈 자조금 단체가 운영하는 한돈몰은 저지방부위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행세일 기간에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중소식품기업 제품은 우체국쇼핑몰에서 7월1일~15일까지 10% 할

인쿠폰 지급 등 특별기획전 등 특별기획전을 통해 판매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6월25일~7월8일까지 전국 800여개 매장에서 수박, 양파, 마늘, 삼겹살, 한우불고기 등 농축산물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계란·오리 자조금 단체는 7월10일~12일까지 코엑스 광장 동행세일 현장에서 할인판매와 부대행사를 연다.

/한용수 기자 hys@

#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참여 농가 확대

## 농식품부, 전년비 3배 250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참여 농가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린 250곳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2년 도입돼 지금까지 542 농가가 참여했고, 이 중 405 농가에서 약 8만 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누계 총액 8억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휘에 농

가가 주로 활용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다겹보온커튼을 이용하는 시설원예의 경우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이 간소화 돼 그동안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소규모 감축 농가들도 개별 또는 지역·마을 단위 묶음 사업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작년 82 농가 수준이던 참여 농가 수를 올해 3배 이상인 250 농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용수 기자